

4.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정책 전망

전 성 훈

통일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할 북핵정책의 기본방향은 북한과의 공세적이고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6자회담을 보완하면서 북한 비핵화 과정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정책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기본골격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북핵폐기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29일 발표된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사용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북한 비핵화'라는 항목을 별도로 만들었다. 정강정책은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핵물질과 핵무기의 안전한 확보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둘째,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되 북·미 직접 대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5년간의 6자회담 과정과 그 공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6자회담을 보완하고 북핵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위급 북·미 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만 호응한다면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 평양과 워싱턴에 상주연락사무소가 개설되고, 외무성과 국무부의 장관급을 대표로 하는 대화채널이 구축될 가능성도 있다.

셋째, 북한 정권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나 안이한 시각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과 경험을 토대로 대북 협상을 추진할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가 체결한 「제네바 기본합의문」이 파기됨으로써 민주당 인사 가운데는 북한에게 더 이상 속아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북핵폐기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북·미 직접대화의 격을 높이되 이와 함께,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북한에 가해질 경제·외교적인 압박수단도 함께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근과 채찍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북한 정권에 대해서 분명한 선택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북한의 합의위반 전력을 잘 알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폐기 협상과정에서 강력한 검증장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강정책에도 명시되었듯이,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모든 대북협상에서 '검증 가능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매 항목마다 검증 가능한지를 따져가며 합의할 것이고, 북한의 약속 이행 여부를 철저히 챙길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가 테러지원국 해제의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약속받은 검증 관련 합의보다 더 강력한 검증을 추진할 것이다.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과 현장 샘플채취는 물론이고, 사실상 검증대상에서 제외된 핵폐기물 저장소와 기폭실험 시설 및 핵 실험장에 대한 사찰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국제협력과 다자기구를 중시하는 입장을 고려할 때, 대북사찰에서 IAEA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난 10여 년간 훼손된

한·미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대북정책과 북핵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한국 정부의 의견을 비중 있게 받아들일 것이다. 북·미 직접대화를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한국이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많으니 우리 정부도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 일각의 주장은 근거 없는 기우일 뿐이다.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제대로만 대응한다면,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은 굳건한 한·미 공조 하에 국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 정권은 오바마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크게 고무되어 있을 것이다. 공화당 보다 훨씬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기대 속에, 오바마 진영의 유연한 입장을 역이용해서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이 처한 동북아는 인도·파키스탄이 있는 서남아시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은 아직도 전쟁당사국이다.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전쟁 당사국이 핵을 갖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새로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가 얼마나 인내심을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북한의 협상전략이 이미 다 노출된 상태에서, 미국의 인내심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협상에 의한 북핵 폐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 순간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강력한 압박이 북한 정권에게 가해질 가능성이 많다. 제1차 북핵위기가 한창이던 1994년 영변 핵시설을 공격하려 했던 빌 클린턴과 2004년 대통령 선거유세에서 협상으로 안되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천명한 존 케리 후보가 모두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